

보도설명자료 (‘17.11.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넓은 초원, 강한 햇볕, 긴 해안선 남호주...신재생
밀어붙이다 5년만에 ‘電力 악몽’,” “코카콜라 공장
떠나고, 연금 노인은 전기료 제때 못내 ‘허덕’”
(11.2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남호주는 작년 9월 태풍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정전사태를 겪음
 - 태풍이 상륙하자 풍력발전기가 모두 멈춰버린 것
- “전기료가 급등한 것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했기 때문”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호주 에너지시장위원회(AEMO)*의 ‘17.3월 발표에 따르면, 남호주주 정전(‘16.9월)은 토네이도로 27개 송전탑이 붕괴되고 3개 송전망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주요 발전원의 계통 연결이 중단된데 기인

* 호주 에너지시장위원회: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

- 또한,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간헐성(intermittency)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규모 정전을 일으킨 원인은 아니라고 확인하였음
- 남호주주의 전기요금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 데 일부 원인이 있으나,
 - 가스가격 급등, 노후설비 교체 등에 따른 송배전 설비 투자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

- ① 남호주는 ‘16년 석탄발전소 폐쇄로 ‘16~‘17년 기준 전체 설비용량에서 가스발전이 약 60%, 신재생이 약 40%를 차지하는 실정

* 남호주 발전설비용량 비중(%): (가스) 56, (풍력) 38.2, (유류) 5.3, (기타) 0.5
(출처: 호주 에너지 규제청(Australian Energy Regulator), ‘17.9.30 기준)

-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호주는 환경 규제에 의한 가스전 개발 저조, LNG 수출 확대 등으로 내수 가스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(‘15년 대비 ‘17년 약 2배 ↑)*하면서,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

* 호주 내수 가스가격(A\$/GJ): (∼‘14) 3~4 → (‘15) 6 → (‘16) 6.8 → (‘17) 12
(출처: 한국가스공사)

- ② 송·배전 비용 증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까지 송·배전 설비를 건설하는 비용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음

- 그러나,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(ACCC)*에 따르면, ‘08년 이후 노후 송·배전 설비 교체,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투자 확대가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

*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: Australia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전병근 과 장 (044-203-5160)
이기현 사무관 (044-203-5166)
전력진흥과 남경모 과 장 (044-203-5260)
이보라 사무관 (044-203-5261)